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 독일, 유자녀 여성의 고용 제고 목적으로 '종일교육' 확대<sup>1)</sup>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통계청은 '종일학교(Ganztagsschulen)' 제도를 통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최소 7시간의 수업을 제공한다.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점심을 제공한 후 오후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종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후 4시나 5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시간에 학생은 숙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일반 또는 특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부 종일학교는 다양한 협회와 협력해 스포츠 또는 음악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 이와 관련해 최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종일 교육(Ganztagsbetreuung)' 확대가 엄마들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공공예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발표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로 인한 국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종일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어머니 고용률이 3~7%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의뢰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고용률이 증가하면 가족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금 증가', '사회복지 지급 감소', '사회보험부담금 증가'로 공공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정부 예산 증가액은 연간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453억 원)에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6,905억 원) 규모에 이른다.
- 독일경제연구소의 카타리나 교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는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 시간을 늘려줄 것이며 여러 가족뿐만 아니라 공공예산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규모는 연간 최대 20억 유로에 달하므로 정부는 종일교육을 확대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교육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수업을 진행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의 모든 주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크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카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현재 절반 정도의 초등학생이 종일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백만 개의 교육 장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15,000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내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건물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억 유로(한화 약 6조 7,263억 원), 종일교육 운영비용은 연간 최대 40억 유로(한화 5조 3,810억 원)로 예상된다.

- 한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종일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71%였지만(2017년 기준), 실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일학교 운영 비율은 48%에 그쳤다. 이에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종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 기금 20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은 주 5일간 8시간의 돌봄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점심 이후 또는 방과 후 교육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는 종일학교 외에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호르트(Hort)’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호르트나 종일학교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주정부별로 살펴보면 함부르크가 9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이어 작센주(86%)와 브란덴부르크주(80%) 순으로 나타났다. 작센-안할트주와 베를린도 7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에른주와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이용률이 42%로 낮아졌으며,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30%,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에 그쳤다.

#### • 참고문헌 •

- DIW(2020), “Fiskalische Wirkungen eines weiteren Ausbaus ganztägiger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publikationen/73/diw\\_01.c.702895.de/diwkompakt\\_2020-146.pdf](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publikationen/73/diw_01.c.702895.de/diwkompakt_2020-146.pdf) (검색일: 2020.03.22.).
- News4teachers(2019.05.19.), “Geplanter Rechtsanspruch: So viel kostet der Ganzttag für alle Grundschulkind”, <https://www.news4teachers.de/2019/05/geplanter-rechtsanspruch-soviel-kostet-der-ganzttag/> (검색일: 2020.03.25.).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07.05.), “Betreuungslücken für Grundschulkind schließ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grundschulkind-schliessen/133604> (검색일: 2020.03.22.).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1.20.), “Ausbau der Ganztagsbetreuung finanziert sich zum Teil selbs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usbau-der-ganztagsbetreuung-finanziert-sich-zum-teil-selbst/144602> (검색일: 2020.03.22.).
- Spiegel(2020.1.20.), “Ganztagsbetreuung könnte sich zum Teil selbst finanzieren”, <https://www.spiegel.de/panorama/grundschulen-ganztagsbetreuung-koennte-sich-zum-teil-selbst-finanzieren-a-5bb3ff06-6235-41a8-a289-95f6ed48bc27> (검색일: 2020.03.22.).

## 독일, 코로나19 상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독일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3월 23일부터 이동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다. 가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만남이 금지되고 있으며, 출퇴근이나 응급치료, 생필품 구매, 운동 등의 필수적인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식당 등 요식업과 미용실 등의 여러 업소 영업이 중지되었고,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이동제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 및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더 높으나, 피해자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긴급콜센터에 평소보다 더 적은 수의 전화를 통한 지원 요청이 있었던 반면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 긴급요청 건수는 늘어났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여성보호 시설을 찾는 여성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 자를란트 대학의 미하엘 심리치료학과장은 “중국 우한의 경우, 격리 및 폐쇄 조치가 시행된 이후 여성 보호시설에 머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가 3배 이상 높아졌으며, 중국 경찰은 평소보다 두 배 많은 긴급 지원 전화를 받았다”며 “독일 역시 격리조치로 인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외부세계로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알릴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독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 중이다. 먼저 독일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http://www.hilfetelefon.de))를 통해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 상담을 지속 운영한다고 전했다. 낙태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여성 보호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호텔 등을 활용한 숙소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공간인 ‘여성의 집(Frauenhäuser)’ 총 353곳과 약 40개의 임시 주거시설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 시설만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먼저 베를린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해 호텔 2개를 임대하기로 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운영이 중지된 상태라 임대가 가능하다. 베를린 의회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해 고립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시설의 수를 늘리고 있다. 임대하기로 결정한 호텔 건물 한 곳은 피해 가족이 머물 예정이며, 다른 한 호텔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되어야 하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 베를린에는 6개의 ‘여성의 집’을 비롯해 약 90여 개의 보호시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설이 늘 붐비고 피해자가 계속 시설을 옮겨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베를린 의회는 기존 시설과 새로 확보한 호텔 두 곳 외에도 앞으로 계속 여성보호시설 확보를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베를린 경찰청은 2020년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정폭력 사건 접수가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그리고 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숙박 마련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이 수행될 예정이다. 베를린 의회는 시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복지청 직원과 학교 및 사회복지사가 4월 부활절 휴가 기간과 격리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동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들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무료로 법의학 의사를 통해 폭력 피해나 부상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스키아 에쥔트 샤리테병원 폭력피해 보호를 위한 외래진료소 부소장은 “기관 폐쇄 조치로 인해 학교, 유치원, 보육교사 등이 시민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부상이나 상처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격리 상황에 증가할 수 있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 북도시인 함부르크의 경우에도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 숙박시설이 마련된 상태다. 함부르크 의회는 코로나 위기에 가정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발표자료에 따라, 함부르크의 모든 동네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숙소를 마련 중이다. 의회는 2020년 3월, 숙소 한 곳을 앞서 예약했다.
- 함부르크에는 5곳의 여성보호시설이 있지만, 의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족이 격리되어 지낼 수 있거나 더 많은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함부르크 의원들은 “이미 확보된 숙소 외에도 더 많은 공간을 예약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함부르크에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 건수는 아직 증가하지 않은 상태다.

#### • 참고문헌 •

berliner-zeitung(2020.04.02.), “Berliner Senat mietet Hotels für Opfer häuslicher Gewalt”, <https://www.berliner-zeitung.de/mensch-metropole/berliner-senat-mietet-hotels-fuer-opfer-haeuslicher-gewalt-li.80329> (접속일 : 2020.04.11.)

spiegel(2020.03.27.), “Hamburg bucht erste Pension für Opfer häuslicher Gewalt”, <https://www.spiegel.de/panorama/coronavirus-haeusliche-gewalt-hamburg-bucht-erste-pension-fuer-betroffene-frauen-a-00000000-0002-0001-0000-000170213661?fbclid=IwAR05jhuOEB6KQtHyQIn400XZXRxKnNswKjdLfwSv7bjtKT-y2oXOxXdqns> (접속일 : 2020.4.11.)

tagesschau(2020.03.28.), “Man muss mit dem Schlimmsten rechnen”, <https://www.tagesschau.de/ausland/corona-europarat-haeusliche-gewalt-pejcinovic-buric-101.html> (접속일 : 2020.4.11)

## 독일, 디지털 성폭력 예방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주력

- 독일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성폭력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비판적으로 다루거나 금지 조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동,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독일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독립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과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이다. 독립자문관은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치됐으며, ‘독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범위,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정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 ‘사이버 그루밍(Cybergrooming)’과 ‘섹스팅(sexting,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그루밍’은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 튀링겐(Thüringen)주 교육 노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462명의 학생이 섹스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여학생이 75%였으며, 대다수가 11세에서 14세 사이 학생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 노조는 교사가 경찰, 상담센터, 청소년복지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요하네스 빌헬름 로릭 독립자문관은 “그루밍의 경우, 가해자가 대화창에서 아동성폭력을 위해 접근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찰에 사이버그루밍을 심각한 범죄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방정부의 독립자문관 부서는 부모, 교사와 같은 교육 관련 지도자, 검색엔진이나 온라인게임 업체 등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된 사용 영역 개설 ▲어린이 및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조언 및 지원 서비스를 보기 쉽게 배치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전달 ▲법 집행 당국과 서비스 기관에 더 나은 재정 및 인력 배치 확보 등이다.
-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해 부모,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s://www.wissen-hilft-schuetzen.de>)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안전 이용,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지, 디지털 윤리, 학교 성폭력, 미디어 사용법, 채팅 위험성, 포르노그래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었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48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개되어있는 사업 중 하나인 <샤우 힌(SCHAU HIN!)>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홈페이지(<http://www.schau-hin.info/>)를 보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 ‘게임’ 등 분야별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바람직한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와 양육자, 교사가 참고하면 좋을 정보는 섹션별로 나눠 정리해놓았다.
- 구체적으로 보면 ‘JusProg([www.jugendschutzprogramm.de/](http://www.jugendschutzprogramm.de/))’에서는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I-키즈(<https://www.i-kiz.de/>)’와 ‘Jugendschutz(<http://www.jugendschutz.net/>)’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알람이 뜨거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 • 참고문헌 •

- UBSKM(2020), “WISSEN-HILFT-SCHUTZEN,DE”, <https://www.wissen-hilft-schuetzen.de> (최종 검색일 : 2020.4.20.)
- UBSKM(2020.03.23), “5 Jahre Betroffenenrat beim 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esse-service/pressemitteilungen/detail/5-jahre-betroffenenrat> (최종 검색일:2020.4.20.)
- UBSKM(2020), “Sexuelle Gewalt mittels digitaler Medien”,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aevention/sexuelle-gewalt-mittels-digitaler-medien> (최종 검색일 : 2020.04.20.)
- GEW (2018.06.08.), “Digitale sexualisierte Gewalt: Lehrkräfte wünschen sich Fortbildungen”, <https://www.gew-thueringen.de/aktuelles/detailseite/neuigkeiten/digitale-sexualisierte-gewalt-lehrkraefte-wuenschen-sich-fortbildungen/> (최종 검색일 : 2020.04.20.)

## 독일, 코로나 위기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감소하고, 돌봄 부담은 증가

- 코로나 위기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강제로 줄이게 하고, 집안일과 무급 돌봄 영역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남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은 무급 가사노동을 하는 과거 노동 분업 구조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 독일의 ‘한스 뢰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이 칸타 도이칠란트(Kantar Deutschland)에 의뢰해 총 7,677명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여성의 노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집안일과 무급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WZB)의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의 16%가 코로나19 이후 일을 덜 하게 됐으며, 이는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모든 보육센터와 유치원, 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부모, 특히 여성이 주요 부담을 지게 됐다. ‘한스 뢰클러 재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자녀 보육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인 여성 비율은 27%에 달했다. 이에 비해 근무시간을 줄인 남성 비율은 16%였다. 저소득 가정일 경우 근무시간을 줄인 남녀 비율 격차는 더욱 컸다.
-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여 돌봄 손실을 메운 비율은 가구당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0유로(한화 약 273만 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집안일 및 무급 돌봄 업무를 한 비율은 31%(남성 19%)였다. 월 소득이 2,000유로부터 3,200유로(한화 약 273만~436만 원) 사이 가구의 경우, 여성이 근무시간을 줄인 비율은 32%(남성 18%)로 2,000유로 이하인 가구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월 소득이 3,200유로(한화 약 436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이 근무시간을 비율이 24%(남성 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독일 경제주간지 ‘비어트샤프트보허(WirtschaftsWoche)’ 보도에 따르면, 사회학자 유타 알멘딩거(Jutta Allmendinger)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역할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72%이지만 30년 전인 60% 미만대로 감소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1991년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57%였고, 이전에는 55% 정도에 그쳤다.
- 유타 알멘딩거는 “1990년대 초에는 3세 이하 어린이나 방과 후 아이를 돌보는 종일학교 등이 없어 여성이 경제활동보다 무급 돌봄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며 “하지만 현재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유치원, 학교 등이 문을 닫으면서 과거처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가 늘었고 이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 서부에 위치한 파더보른 대학교(Universität Paderborn)의 베티나 콜라우쉬 교수는 “최근 예산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파트너와 맞벌이 하는 여성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더 많은 돌봄 일을 수행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집안일과 돌봄 일에 대한 여성 의존도가 높아져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코로나 위기 이후 증가한 돌봄 노동 일이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중 코로나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집안일과 돌봄 일을 비슷한 비율로 나눠서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한 가구 당 수입이 2,000유로(한화 약 273만) 미만인 부부나 파트너십의 경우 52%가 코로나 위기 이후 여성의 집안일 및 돌봄 일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로 인해 청소, 요리, 학교 교육을 대체할만한 아이 돌봄 등의 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주로 여성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감당하고 있다. 독일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은 “현재 가정마다 위기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위기로 인해 남녀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 · 참고문헌 ·

Hans-Böckler-Stiftung(2020.05), “RÜCKSCHRITT DURCH CORONA”, <https://www.boeckler.de/de/boeckler-impuls-ruckschritt-durch-corona-23586.htm> (접속일: 2020.05.28.)  
WirtschaftsWoche(2020.05.05.), “Zerstört Corona Frauen-Karrieren?”, <https://www.wiwo.de/erfolg/betrieb/zurueck-an-den-herd-zerstoert-corona-frauen-karrieren/25802466.html> (접속일: 2020.05.26.)

## 독일, 온라인 기반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경찰의 잠입수사 허용

- 독일에서는 2019년 10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시 베르기슈글라트바흐(Bergisch Gladbach)에서 한국의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 1,800명의 회원을 가진 아동 성착취물 관련 휴대폰 채팅 그룹이 발견된 것이다. 독일연방범죄수사청(BKA)에 따르면 1,800명의 가해자들은 그룹채팅창을 통해 아동 성학대 관련정보와 사진 등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1만 장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었으며, 가해자 중에서는 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성적으로 학대, 폭행해 사진과 영상을 찍은 이들도 있었다.
- 끔찍한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가 발견된 이후, 독일에서는 전국구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56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중 절반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나머지는 다른 주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포된 가해자는 10명이다. 현재까지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와 관련해 성학대와 성폭력을 당한 아동 피해자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압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쾰른경찰청은 약 300명이 연계되어 있는 ‘특별조직’을 구성했으며, 최대 161명의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경찰청(LKA)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컴퓨터로 생성한 가짜 아동 이미지 사용을 통해 직접 여러 채팅창에 들어가 더 많은 사례와 가해자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고, 이에 연방 법무부는 조건 수락했다. 독일 〈Aachener〉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조사관이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수사 방법은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그루밍(Cyber-Grooming) 관련 법안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범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친밀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한다.

-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 보안 당국에 따르면 아동 성 학대 관련 범죄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범죄수사청(BKA) 자료를 보면 실제 아동 성착취물 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서 성폭력 묘사나 이미지에 대한 경고 조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언론매체 ‘베를린모어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성착취물 배포에 관한 범죄가 52%, 아동 성착취물 배포도 65% 증가했다. 이처럼 성착취물 배포 범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배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에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퇴치 중앙 센터(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를 마련했다. 범죄수사청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의 아동 성착취물은 국제 차원의 범죄이며 데이터를 몇 초 만에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은 독일과 전 세계 수사기관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퇴치 중앙센터는 국내 및 해외 기소 당국과 관련 기관 및 조정 사무소 사이의 연계기능을 수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센터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중앙본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돼 아동의 알몸을 찍거나 사진을 판매·교환하는 경우 처벌받게 됐다. 당시 법안 수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범위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독일 형법 184조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 또는 소지하고 있을 경우, 3개월에서 5년 형의 징역에 처한다.

#### • 참고문헌 •

- Bundeskriminalamt(2020), “Zentralstelle für die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https://www.bka.de/DE/UnsereAufgaben/Aufgabenbereiche/Zentralstellen/Kinderpornografie/kinderpornografie_node.html) (접속일: 2020.5.14.)
- Berliner Morgenpost(2020.03.23.), “BKA: Verbreitung von Kinderpornos nimmt laut BKA dramatisch zu”, <https://www.morgenpost.de/vermischtes/article228756051/Kinderpornografie-BKA-verzeichnete-2019-deutlich-mehr-Faelle.html> (접속일: 2020.5.12.)
- ZEIT ONLINE(2014.11.14.), “Bundestag verabschiedet Gesetz gegen Kinderpornografie”,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4-11/kinderpornografie-missbrauch-gesetz-edathy> (접속일: 2020.5.12.)
- Neue Westfälische(2020.02.05.), “Bergisch-Gladbach: Zurzeit 56 Beschuldigte und 21 missbrauchte Kinder”, [https://www.nw.de/nachrichten/zwischen\\_weser\\_und\\_rhein/22687315\\_Bergisch-Gladbach-Zurzeit-56-Beschuldigte-und-21-missbrauchte-Kinder.html](https://www.nw.de/nachrichten/zwischen_weser_und_rhein/22687315_Bergisch-Gladbach-Zurzeit-56-Beschuldigte-und-21-missbrauchte-Kinder.html) (접속일: 2020.5.14.)
- Aachener zeitung(2019.11.25.), “Missbrauchsfall Bergisch Gladbach wohl größer als Lügde”, [https://www.aachener-zeitung.de/nrw-region/missbrauchsfall-bergisch-gladbach-wohl-groesser-als-luegde\\_aid-47401905](https://www.aachener-zeitung.de/nrw-region/missbrauchsfall-bergisch-gladbach-wohl-groesser-als-luegde_aid-47401905) (접속일: 2020.5.14.)

## 영국, 2020년 12월 말부터 여성용품 부가가치세 폐지<sup>2)</sup>

- 영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용품에 부과됐던 일명 ‘탐폰세(tampon tax)’가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여성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5%를 부과하고 있으나 3월 1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첫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탐폰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생리용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탐폰세가 폐지되면 20매 탐폰을 기준으로 7펜스(한화 약 105원), 12매 생리대는 5펜스(약 75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 여성단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품과 다른 생필품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생리용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랫동안 탐폰세 철폐 운동을 벌여왔다. 원래 17.5%에 달했던 탐폰세는 노동당 의원이었던 다운 프리마로가 탐폰세 인하 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에 5%까지 낮아졌다.
- 최근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탐폰세 폐지 캠페인은 2014년 5월 골드스미스 대학교 학생이었던 라우라 코리튼이 주도했던 ‘Stop Taxing Periods’이다. 당시 코리튼은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탐폰세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3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코리튼은 2020년 3월 6일 가디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탐폰세 폐지는 성차별주의의 끝을 뜻한다. 생리를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일도 생긴 것”이라며 탐폰세 폐지를 환영했다.
- 20년 가까이 지속한 캠페인으로 영국 정치권도 탐폰세 폐지를 지지했으나 지금까지 유지했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법에 따라 부가세를 매겨야 해서 영국 정부가 원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었다. 유럽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소 세율을 적용한 것이 5%였고, 영국은 2000년 이후 이 과세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더는 유럽연합법에 묶일 필요가 없게 됐고, 유럽연합 탈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영국의 탐폰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 영국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생리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는 생리 빈곤(period pover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사건을 통해 청소년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처럼 영국에서도 비슷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 영국의 아동 권리 보호단체인 Plan International이 2018년 3월 14~21세 여성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조사 참가자 중 42%가 생리대 살 형편이 안되어 화장지를 덧대는 등 임시방편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 중 7%는 양말, 신문지나 종이 등으로 임시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 생리 빈곤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국교육연합(the National Education Union)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3만 7천 명 이상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수업을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초중고생 170만 명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예산 2천만 파운드 (약 301억 원)를 편성했다. 생리대 지급은 각 학교가 필요한 분량의 생리대를 영국 교육부가 지정한 유통업자를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참고문헌 •

- BBC(2015.02.09.), "Why the 'tampon tax' is here to stay- for a while at least",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31299254/why-the-tampon-tax-is-here-to-stay---for-a-while-at-least> (검색일: 2020.03.27.).
- BBC(2020.03.07.), "Budget 2020: Pledges on tampon tax and the future of cash", <https://www.bbc.com/news/business-51772425> (검색일: 2020.03.27.).
- The Guardian(2020.03.06.), "Budget 2020: chancellor plans to finally end tampon tax",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mar/06/budget-2020-chancellor-plans-to-finally-end-tampon-tax> (검색일: 2020.03.27.).
- The Guardian(2020.1.18.), "Free period product to be available in schools and colleges in England",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0/jan/18/free-period-products-to-be-available-in-schools-and-colleges-in-england> (검색일: 2020.03.27.).
- Plan International(2018.03.12.), "40% of girls have used toilet roll because they've struggled to afford sanitary wear, survey reveals", <https://plan-uk.org/media-centre/40-of-girls-have-used-toilet-roll-because-theyve-struggled-to-afford-sanitary-wear> (검색일: 2020.03.27.).

## 영국,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신부 재소자 임시 출소 시행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교정본부(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는 2020년 3월 31일 임신부 재소자 임시 출소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교도소 내 코로나19 (COVID-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임신부 재소자들이 임시로 출소시키기로 한 것이다.
- 그동안 영국 정부는 다인실에 수감된 임신부와 산모 재소자들이 코로나19 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방에 분리해 보호해왔으나 3월 31일부터 교도소 안 재소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는 경범죄 혐의로 수감된 임신부 재소자들에 한해 임시 석방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로버트 벅랜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임신부 재소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출소 조치가 필요하다. 교도소장이 임시 출소증을 발급하면 임신부 재소자들은 자가 격리하며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모든 임신부, 산모 재소자가 임시 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재소자들은 임신부라고 해도 임시 출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교도소는 임시 출소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 출소 뒤 안전하게 지낼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한 뒤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임시 출소 허가증을 발급한다. 임신부뿐 아니라 최근 출산한 재소자와 아기도 임시 출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임시 출소한 재소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 영국 정부는 임신부 재소자 임시 출소 외에도 경범죄 재소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가석방을 단행하고 있다. 교도소는 좁은 공간을 여러 명과 오랜 시간 공유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범죄자 가석방 정책은 교도소 수감자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 중인 남은 형기가

두 달 미만인 경범죄 재소자 4,000여 명이 가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에서는 교도소 내 감염이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4일 기준으로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는 모두 88명, 자격자라는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5일에는 60대 교도소 직원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영국 교도소 내 감염이 재소자뿐 아니라 교도소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 재소자 가석방은 보리스 존슨 정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선택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범죄자 처벌 강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은 범죄자들을 “길거리에서 없애겠다”며 흉악범의 교도소 수감 기간 연장을 주장할 만큼 가석방에 너그럽지 않다. 정부가 기존의 범죄자 처벌 정책 노선과 상반되는 경범죄자 가석방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영국 교도소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 참고문헌 ·

- BBC(2020.04.04.), “Coronavirus: Low-risk prisoners set for early release”, <https://www.bbc.com/news/uk-52165919> (검색일: 2020.04.07.)
- BBC(2020.04.05.), “Coronavirus: Two Pentonville Prison staff members die”,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2169957>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31.), “Pregnant prisoners to be temporarily released from custody”,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prisoners-to-be-temporarily-released-from-custody> (검색일: 2020.04.07.)
- GOV.UK(2020.03.13.), “Coronavirus(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검색일: 2020.04.07.)

## 영국, 코로나19 봉쇄령 이후 가정폭력 피해신고 급증

-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신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의심 사망사고도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단체인 Refuge는 2020년 4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뒤 피해신고 건수가 봉쇄령 이전 주와 비교하면 평균 270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Refuge는 영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전국 가정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이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리기 전인 2주 전보다 평균 25% 증가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접속 횟수도 같은 기간 1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 산드라 홀레이 Refuge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고, 가해자와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하는 요즘 같은 봉쇄 기간에는 신고할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 피해 사례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 이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전국 봉쇄령 조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Counting Dead Women'의 설립자 카렌 잉가라 스미스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아동을 포함해 여성 총 16명이 가정폭력으로 숨졌으며,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가 가정 및 아동 폭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영국 내무성 특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 Counting Dead Women은 남성에게 살해당한 영국 여성 관련 통계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스미스가 주도했다. 스미스는 인터넷 검색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계자들을 접촉한 뒤 자료를 모았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영국 전역에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피해 사망자 수치가 같은 기간 평균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평균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숨진 여성 7명은 현재 파트너나 헤어진 연인에게, 3명은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미스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남성을 폭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었던 남성이 폭력을 더 자주 휘두르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전국 봉쇄령 이후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도 슈퍼마켓 직원에게 비밀 코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피해자들이 슈퍼마켓 식료품 쇼핑을 이유로 외출했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임 베라 바일드 영국 웨일스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국장은 “만약 슈퍼마켓 직원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사용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나중에 슈퍼마켓 직원이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 참고문헌 •

- Refuge (2020.04.06.), “25% increase in calls to national domestic abuse helpline since lockdown measures began”, <https://www.refuge.org.uk/25-increase-in-calls-to-national-domestic-abuse-helpline-since-lockdown-measures-began/> (검색일: 2020.4.23.)
- The Guardian (2020.04.15.), “Domestic abuse killings more than double amid covid-19 lockdow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apr/15/domestic-abuse-killings-more-than-double-amid-covid-19-lockdown?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Echobox=1586978464](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apr/15/domestic-abuse-killings-more-than-double-amid-covid-19-lockdown?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Echobox=1586978464) (검색일: 2020.04.23.)
- BBC (2020.4.15.), “Coronavirus: Shop workers should be trained to help abuse victims”,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2296284> (검색일: 2020.4.23.)
- UK Parliament (2020.04.14.), “Impact of Covid-19 (Coronavirus) on domestic and child abuse examined”,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home-affairs-committee/news-parliament-2017/coronavirus-domestic-and-child-abuse-evidence-19-21/> (검색일: 2020.4.23.)

### 영국, 코로나로 치료 중단된 불임환자 위해 난자 냉동기간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

-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행 최대 10년인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난자와 정자 등을 얼렸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료가 일시 중단된 불임 치료(fertility treatment)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 현재 관련 법은 냉동 난자와 정자, 배아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냉동 난자 보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영국 정부는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시행했고, 영국 공공의료기관인 국민 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해 전국의 불임 치료 클리닉은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에 3월 23일부터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이 때문에 불임 치료 환자들은 약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

- 로드 베텔 영국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4월 27일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불임 치료 중인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치료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임 치료 과정에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이 포함된 환자들을 위해 냉동 보관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해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전국 공립 및 사설 불임 치료 클리닉이 2020년 5월 11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영국의 불임 치료 클리닉 규제 기관이자 배아 연구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은 5월 1일,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불임 치료 클리닉이 다시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HFEA는 재운영 조건으로 대기실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운영, 필수 개인 보호장비 구비 등을 제시했다. 불임 치료 클리닉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 설명하는 계획서를 HFEA에 제출한 뒤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클리닉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 하지만 NHS 내 불임 치료 클리닉은 사설 병원들보다 재운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불임 치료 클리닉 내 의료 인력을 포함해 많은 NHS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전방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NHS 의료진들조차 마스크와 가운 등 개인 보호장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NHS 내 불임 치료 클리닉이 HFE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상황과 별도로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최대 10년인 난자와 정자, 배아 냉동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학 기술 발전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냉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2020년 5월 5일 마감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법안 개정에 반영된다.

#### • 참고문헌 •

- GOV.UK(2020.4.27.), “Storage limit for frozen eggs, sperm and embryos extended during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gov.uk/government/news/storage-limit-for-frozen-eggs-sperm-and-embryos-extended-during-coronavirus-outbreak> (접속일: 2020.5.13.)
- GOV.UK(2020.5.1.), “Health secretary welcomes reopening of fertility servic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secretary-welcomes-reopening-of-fertility-services> (접속일: 2020.5.13.)
- The Guardian(2020.5.10.), “Coronavirus doctors call for inquiry into PPE shortages for NHS staff”,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10/coronavirus-doctors-call-for-inquiry-into-ppe-shortages-for-nhs-staff> (접속일: 2020.5.13.)

### 영국 여성단체들, 코로나19로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 겪는 여성의 특수성 반영한 정책적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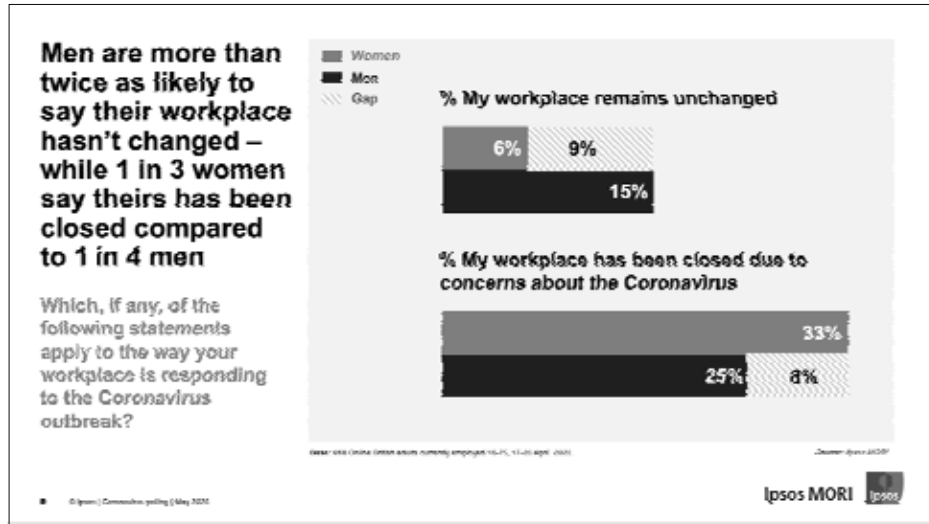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정서적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발표됐다.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실직 우려가 정서적 불안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여성단체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와 시장조사 업체인 입소스 모리(Ipsos Mori)가 5월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여론조사(Public opinion on the COVID-19)’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응답자 10명 중 6명(61%)이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전체 남성 응답자 10명 중 4.7명(47%)이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셈이다. 해당 자료는 입소스 모리가 영국 16~7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타격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문에 내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 여성 응답자 중 6%, 남성은 15%로,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직장이 폐쇄됐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33%였지만, 남성은 전체의 25%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걱정하는 감정 노동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4%가 ‘주변에 외로운 이웃이나 취약계층에게 연락했다’고 했으며, 남성은 전체의 3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이 괜찮은지 확인한다’고 답한 여성과 남성 응답자는 각각 78%와 63%로 여성이 더 많았다. 자가격리된 주변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한 여성 응답자는 21%, 남성 응답자 16%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주변인을 돕는 것으로 조사됐다.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영국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68%, 남성은 64%로 나타났다.
- 포셋 소사이어티 샘 스메더스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정서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할 때 영국 정부는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뒷전에 밀쳐둔다면 영국의 경제 회복은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영국 여성 단체와 여성 운동 활동가들은 많은 여성이 슈퍼마켓 직원이나 유아 보육, 노인 병간호 등 저임금을 받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 지난 3월 포셋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영국 여성단체 50곳은 공동 성명서를 내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직면한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Fawcett society (2020. 5. 20.) "Women are bearing the emotional brunt of the coronavirus crisis",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women-are-bearing-the-emotional-brunt-of-the-coronavirus-crisis> (접속일: 2020.5.27.)

#### • 참고문헌 •

- Fawcett society (2020. 5. 20.) "Women are bearing the emotional brunt of the coronavirus crisis",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women-are-bearing-the-emotional-brunt-of-the-coronavirus-crisis> (접속일: 2020.5.27.)
- Ipsos Mori (2020.5.26.) "Coronavirus, Tracking UK public perception",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2020-04/coronavirus-covid-19-infographic-ipsos-mori.pdf> (접속일: 2020.5.27.)
- Fawcett society (2020. 3.1) "Coronavirus: Joint call for women's visibility in UK response", <https://www.fawcettsociety.org.uk/news/coronavirus-joint-call-womens-visibility-uk-response> (접속일: 2020.5.27.)

### 프랑스, 성범죄 혐의 폴란스키 감독의 세자르 영화제 수상 소식에 비판 여론 확산<sup>3)</sup>

- 2020년 2월 28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 위치한 살 플레엘(Salle Pleyel) 극장에서는 프랑스 최대 영화 시상식인 제 45회 세자르(César)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으로 얼룩졌는데, 바로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 감독 때문이다.
- 논란은 시상식이 열리기 전부터 불거졌다.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나는 고발한다(원제: J'accuse, 영문: An Officer and a Spy)'가 무려 12개 부문 후보에 지명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시상식 보이콧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자르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도덕적인 잣대로 작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폴란스키 감독 후보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 영화인 수백여 명이 세자르 영화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하면서 위원회 전원이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폴란스키 감독과 그의 작품은 후보로 오른 상태로 시상식은 개최되었다.

3) 작성: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폴란스키 감독은 미국에 거주하던 1977년, 미성년자인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범죄인정 조건부 감형협상(플리바게닝) 과정에서 돌연 출국해 버렸다. 40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프랑스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차례 폴란스키 감독을 자국으로 송환 및 기소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국적자인 폴란스키 감독은 파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는 프랑스 한 여배우가 폴란스키 감독에게 과거 18세일 때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폭로했지만, 폴란스키 감독은 혐의를 부인했고, 해당 시점이 과거 1970년대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 이번 폴란스키 감독의 후보 지명 이후 프랑스의 프랑크 리에스테르(Franck Riester) 문화부 장관(Culture Minister)은 공식석상에서 ‘이번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평등정책부 장관(Equality Minister) 역시 폴란스키 감독 후보 지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일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세자르 영화제에서 폴란스키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했다. 폴란스키 감독의 감독상 수상이 발표되자 장내는 침묵에 휩싸였다가 객석 일부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 아델 애넬(Adele Haenel)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시상식장을 떠났고, 이어 몇몇 참석자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아넬은 과거 그녀가 12세 때 처음 출연한 영화감독이 본인을 성추행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혀 프랑스 내 미투(Me Too) 운동에 앞장서기도 한 배우이다.
- 약 수백여 명의 여성단체 및 여성시민들은 극장 앞에서 폴란스키 감독 구속을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자들은 폴란스키의 이름에 ‘강간하다’란 뜻의 프랑스어(violier)를 더해 ‘비올란스키(violanski)’란 단어를 외치기도 했으며, 시위가 고조되고 시위대 일부가 극장으로 무단진입하려고 하면서 경찰과 일부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폴란스키 감독은 사람들이 본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public lynching)이 두렵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족 및 동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화제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폴란스키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상식은 비판의 목소리로 얼룩진 채 끝나게 되었다.

#### • 참고문헌 •

- BBC(2020.02.14.), “France’s César Academy board quits en masse amid Polanski row”,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494929> (접속일 : 2020.03.20.).
- France 24(2020.02.29.), “Walkouts at ‘French Oscars’ as Roman Polanski wins best director”, <https://www.france24.com/en/20200229-walkouts-at-french-oscars-as-roman-polanski-wins-best-director> (접속일 : 2020.03.20.).
- Euronews(2020.02.29.) “Women walk out of French ‘Oscars’ to protest Roman Polanski win”, <https://www.euronews.com/2020/02/29/women-walk-out-french-oscars-protest-roman-polanski-win-n1145816> (접속일 : 2020.03.20.).
- Reuters(2020.02.27.), “Filmmaker Polanski will not attend ‘French Oscars’ in Paris over criticism”, <https://www.reuters.com/article/us-awards-cesars-polanski/filmmaker-polanski-will-not-attend-french-oscars-in-paris-over-criticism-idUSKCN20L1YO> (접속일 : 2020.03.20.).

## 프랑스, 이동 제한에 따른 가정폭력 증가에 피해 신고방법 다각화 및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국가가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외출하지 않고 장기간 자택에서 머무르며 생활하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동 제한령 기간에는 음식이나 약품 구매, 의사 방문, 운동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되었다. 현재 일부 완화조치가 논의되고 점진적으로 시행되기도 있으나,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그런데 이동 제한령이 실시되면서 한 가지 의도치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가정폭력 피해의 증가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 프랑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Christophe Castaner) 내무 장관(Minister of the Interior)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동 제한령이 발표 및 실시된 3월 17일 이후 국내 가정폭력 신고가 약 30% 이상 증가했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 파리 시에서는 약 36%가 증가했다고 한다.
- 이미 프랑스는 유럽 지역에서도 가정폭력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18-75세)이 매년 약 21만 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에서는 3일에 한 명 꼴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가정폭력 피해 사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성평등 담당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Gender Equality and Combating Discrimination)은 언론사 France 24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긴급번호인 114에 문자를 보내거나 동네 약국에 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운영 중인 마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시 팝업(pop-up) 지원 서비스센터도 마련했다.
- 시아파 장관은 다른 언론사 Le Parisien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지원시스템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들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약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일종의 암호를 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스페인에서 먼저 시작된 이니셔티브(initiative)로, 여성이 약국에서 “마스크19 (Mask 19)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이 말을 들은 약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고, 피해여성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즉각적인 개입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프랑스 정부는 약 1백만 유로(한화 약 1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조달하여 가정폭력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와 피신하는 경우, 호텔 및 보호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 숙박일수는 총 2만일에 이르는데, 이는 1천여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이 아닌 호텔에서 20여일을 임시로 묵을 수 있는 정도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프랑스 외의 국가들이 가정폭력 피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onews(2020.03.28.), "Domestic violence cases jump 30% during lockdown in France", <https://www.euronews.com/2020/03/28/domestic-violence-cases-jump-30-during-lockdown-in-france>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3.30.), "France to put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hotels as numbers soar under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330-france-to-put-domestic-violence-victims-in-hotels-as-numbers-soar-under-coronavirus-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4.10.), "French domestic violence cases soar during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410-french-domestic-violence-cases-soar-during-coronavirus-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France 24(2020.04.21.), "French gender equality minister on help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lockdown", <https://www.france24.com/en/20200421-french-gender-equality-minister-on-helping-victims-of-domestic-violence-during-lockdown> (접속일 : 2020.05.07.)

## 캐나다, 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으로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sup>4)</sup>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급격하게 정책을 선화하였다. 3월 24일부터는 행정 명령으로 마트, 약국, 식당 등 필수적인 서비스장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은 상태이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4월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다.
-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820억 캐나다 달러(약 71조 399억)의 긴급재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 긴급재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의 소득보전 및 세금 보조가 가장 큰 축을 이루지만,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예고하였다. 자택에 머물며 사회적 격리를 할 수 없는 인구가 캐나다 사회에는 존재하며,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같이 캐나다에서도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캐나다 언론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여성, 유소년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정적, 육체적, 감정적, 신체적 학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큰 제약이 생겨 피해자들이 쉼터로 대피하고자 해도 되돌려 보내는 사례 또한 보고되고 있다. 홈리스 문제 또한 늘 젠더 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여성 홈리스인들의 대다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여성 홈리스 중에 젠더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원주민 여성들이 많은 점 등이 그 이유이다.
- 2020년 4월 4일 트뤼도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는데 홈리스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긴급 지원책으로서 4천만 캐나다 달러(약 346억 5천만원)가 연방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를 통해 여성쉼터와 성폭력센터로 지원될 것이며, 2천

4)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6백만 달러(약225억)는 575개의 쉼터(violence against women shelters)로 즉시 배포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4천만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홈리스 대책을 위한 재정으로서, 1억 5,750만 달러(약 1,372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들로 하여금 홈리스인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데 쓰이게 된다. 4백만 달러(약 34억 6천만 원)는 캐나다 여성재단의 성폭력센터(sexual assault centres)에 지원되며, 나머지 천만 달러(약 88억)는 원주민 자치지역과 유콘(Yukon) 지역의 원주민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46개의 긴급 쉼터에 지원된다.

- 한편,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 하순부터 학교와 유치원, 데이케어 등이 일제히 문을 닫게 되면서 집안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3월 마지막 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모가 의사, 간호사, 긴급 구조 요원, 간병 등의 일을 하는 경우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 지원을 시작하여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12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당 200 캐나다 달러를,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0~21세의 자녀에 대해서는 250 캐나다 달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 참고문헌 •

- CTV News(2020.04.06.), "Domestic violence increases with 'stay home' pandemic response", <https://www.ctvnews.ca/health/coronavirus/domestic-violence-increases-with-stay-home-pandemic-response-1.4885597> (검색일 : 2020.04.08.)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2020.04.04.), "Canada announces support to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women fleeing gender-based violenc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4/canada-announces-support-to-those-experiencing-homelessness-and-women-fleeing-gender-based-violence-during-the-coronavirus-disease-covid-19-pandemic.html> (검색일 : 2020.04.08.)
- Global News(2020.04.04.). "Coronavirus: Trudeau announces \$40M for women's shelters, \$10M for Indigenous women and kids", <https://globalnews.ca/news/6778731/coronavirus-womens-indigenous-assault-centres/> (검색일 : 2020.04.08.)
- CBC(2020.03.18.), "Trudeau unveils \$82B COVID-19 emergency response package for Canadians, businesses", <https://www.cbc.ca/news/politics/economic-aid-package-coronavirus-1.5501037> (검색일 : 2020.04.08.)

## 캐나다, 코로나19 상황의 온라인 성착취 증가로 미성년자 보호 TIP 숙지 권고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태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아동 성 착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알버타(Alberta) 주 경찰 인터넷 아동착취 담당부서 (Internet Child Exploitation: ICE)에는 2020년 3월 한 달간 243건의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과거 2년간 같은 달에 평균 110건이 보고된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근처 경찰서나 온라인(Cybertip.ca)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Cybertip.ca 으로 접수된 신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이후 대폭 늘어났다. 경찰은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상태로 공원과 놀이터 까지 닫은 마당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온라인게임이나 SNS, 채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이런 온라인 공간에 범죄자들이 섞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유혹하는데 능숙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가해자와 비슷한 나이대로 속여 접근한 후 성적인 대화를 유도,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보낼 것을 제의하는 것이 흔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2020년 4월 퀘벡주 가티노(Gatineau) 경찰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등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비상사태 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을 부모들이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캐퍼(Capper)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비디오 등을 저장 후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런 이미지 등을 이용해 가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더 강도 높은 성적 착취로 이어가거나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들 이미지들을 가지고 베스트 이미지 투표를 하고 명예의 전당에 공유하기도 하기도 한다. 경찰과 아동 보호 센터는 이러한 커뮤니티들과 다크웹 채팅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섯다운으로 더 많은 아이가 온라인에 머무는 것에 고무되어있는 사용자들의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전문가들은 부모 혹은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모두에게 Cybertip.ca나 아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떻게 미성년자들을 보호할지에 대해 학습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아동 보호 센터가 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의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침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이나 랩탑, 태블릿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앱, 게임,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지 숙지할 것, 자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체험해 볼 것, 집안에서 언제 얼마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칙을 자녀와 함께 정할 것, 그리고 SNS 등에서 자녀에게 친구 요청이 있을 때는 부모와 상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대화 강조하고 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이더라도 부모와 차분한 대화를 가지는 시간이 사건을 조기에 포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CBC(2020. 4. 21.),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on rise in Alberta with perpetrators, victims at home during COVID-19 crisis", <https://www.cbc.ca/news/canada/calgary/online-ice-child-sex-exploitation-alberta-1.5539359> (접속일 : 2020.05.08.)
- Global News(2020.04.21.), "ICE reports spike in online child exploitation cases in Alberta amid COVID-19 pandemic", <https://globalnews.ca/news/6847825/alberta-child-exploitation-rise-coronavirus/> (접속일 : 2020.05.08.)
- CBC(2020.04.24.), "Online sexual predators eager to take advantage of greater access to kids during COVID-19, police warn", <https://www.cbc.ca/news/canada/sexual-predators-children-online-pandemic-1.5542166> (접속일 : 2020.05.08.)
- Canadian Centre of Child Protection(2020), "Supporting you through COVID-19", <https://protectchildren.ca/en/resources-research/supporting-you-through-covid-19/> (접속일 : 2020.05.08.)



## 캐나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여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 투입

- 캐나다 통계청이 2020년 5월 9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3월 캐나다의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3월에 만 1,01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실업률이 전년 대비 2.2%p 증가한 7.8%로, 4월에는 13%로 치솟았다. 이와 같은 급격한 실업률 증가세는 캐나다 통계청이 고용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데, 캐나다 언론은 이 수치조차도 실질적인 캐나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이므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인구 약 170만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고려하면 캐나다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현재 20%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더욱이 이러한 경제위기는 특정 사회계층,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언론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여성에 더욱 가혹한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여성(she)과 불황(recession)을 합성한 단어인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허핑턴 포스트 캐나다의 2020년 5월 9일 보도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마지막 불황인 2008~2009년 불황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업 등의 직종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몰고 왔기에 이를 히세션(He-cession)이라 불렀던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번 불황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한 달간 25세 남녀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15,000명의 25세 이상 남성이 3월 한 달 간 새롭게 실업자가 된 반면 여성 실업자는 403,000명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 캐나다 언론과 학계,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캐나다의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다. 식당, 호텔, 미용업 등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3월 비상사태 선포로 이러한 직종들이 거의 대부분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성들이 동시에 실업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2020년 4월 말 경기 동향에서는 이러한 남녀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으로도 설명이 된다. 4월 말 동향에서는 여성의 전체 실업률이 11.3%, 남성의 실업률은 10.8%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는 3월에 해고된 여성들이 복직을 해서가 아니라 캐나다의 코로나 사태가 4월 내내 악화됨에 따라 문을 닫은 직종들이 더욱 늘어났고 건설업과 같이 남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까지 여파를 미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요컨대 이는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저임금 노동자인 상태에서 비상사태 선포 후 제일 먼저 해고가 된 이후 경제위기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5월 16일 일하는 여성들을 특별히 염두 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캐나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의 여성상공인 전략(WES: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프로그램을 통해 1천 5백만 캐나다 달러(약 13억 2천만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책이다. 이 지원대책의 대상자들은 여성 소상공인들로서, 1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 중 75%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에 쓰일 것이며 나머지 지원금은 여성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홍보비, 임대비 보류, 온라인 플랫폼 개척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에 지출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16일 이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성 사업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매업, 숙박, 요식업 등의 섹터”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이러한 소규모



직종들이 자금난에 취약하다는 점, 여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 동안 경제적 위기에 더불어 육아나 집안일 등의 돌봄 의무를 더 짊어져야 했을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캐나다 지역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2018년 기준 38%의 자영업자가 여성으로, 2018년 캐나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런칭한 WES 프로그램은 기업가와 고객들이 모두 여성인 업종들을 주로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 프로그램이 성별 임금 격차 해결, 가용한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젠더폭력 근절을 주축으로 한 연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 • 참고문헌 •

HuffPost(2020.05.09.), "Canada's Unemployment Crisis Hits Gen Z, Women, Quebecers Hardest", [https://www.huffingtonpost.ca/entry/unemployment-canada-youth-women-quebec\\_ca\\_5eb6ed97c5b64711c0c8d3ff](https://www.huffingtonpost.ca/entry/unemployment-canada-youth-women-quebec_ca_5eb6ed97c5b64711c0c8d3ff) (접속일: 2020.05.18.)

Government Canada (2020.05.16.), "Minister Ng announce more support for women entrepreneurs amid COVID-19",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0/05/minister-ng-announces-more-support-for-women-entrepreneurs-amid-covid-19.html> (접속일: 2020.05.18.)

### 네덜란드,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센터 및 임산부 대상 유선 정기검진 시행<sup>5)</sup>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과 네덜란드 정부의 고강도 대응으로 최근 네덜란드 부모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 먼저,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자녀가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현재 불가피하게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근무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센터(noodopvang)'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 물류, 쓰레기 처리, 소방관, 공무원 등 현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지만 일반 유치원, 학교 등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드시 부모 양측이 현재 필수업종 종사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유동적으로 시설 상황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발생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
- 네덜란드에서는 임신하는 경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거주지 인근 조산사 센터(verloskundigen praktijk) 센터에 등록하고 배정받은 조산사(verloskundige)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출산 전까지 일련의 검사들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러한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5대 도시 중 한 곳인 우트레흐트(Utrecht)시의 경우, 대다수의 조산사 센터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이며, 상당수가 전화로 정기검진을 진행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대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임산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뒤 진료를 보고 있다.
- 집에서 출산하지 않고 병원에서 하는 경우,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면 정상대로 진행하지만 의료진은 평소 위생 관리 절차와 비교하면 더욱 신경 써서 마스크,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하고 출산 서비스에 투입된다. 그리고 분만실에는 무조건 한 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5) 작성: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배우자나 파트너 한 명만 분만실에 같이 있게 된다. 출산 후 6주 경과 시 조산사는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밥 제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고 있다.

- 이혼한 부모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혼 당시 계약한 자녀 교섭 부분에 있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기르고 있는 엄마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아빠 측이 아이들을 기존 동의한 횟수만큼 자녀를 만나러 오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 만약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네덜란드 부모, 그리고 자녀들은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앞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당분간 강력한 정책과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Rijksoverheid(2020.03.20.), "Vragen over noodopvang voor kinderen van ouders in cruciale beroepen of vitale processen",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veel-gestelde-vragen-per-onderwerp/kinderopvang/cruciale-beroepen> (접속일: 2020.04.08.)

RTL Nieuws(2020.04.01.), "Wat doe je als je ex een andere corona-aanpak heeft? 'Ga je zin niet doordrijven'",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5074316/corona-samengesteld-gezin-ex-kind-gescheiden-ouders-maatregelen> (접속일: 2020.04.08.)

RTV Utrecht(2020.03.24.), "Zwanger ten tijde van corona: 'Meer vrouwen kiezen voor thuisbevalling'", <https://www.rtvutrecht.nl/nieuws/2027885/zwanger-ten-tijde-van-corona-meer-vrouwen-kiezen-voor-thuisbevalling.html> (접속일: 2020.04.08.)

### 스페인,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정책 대응<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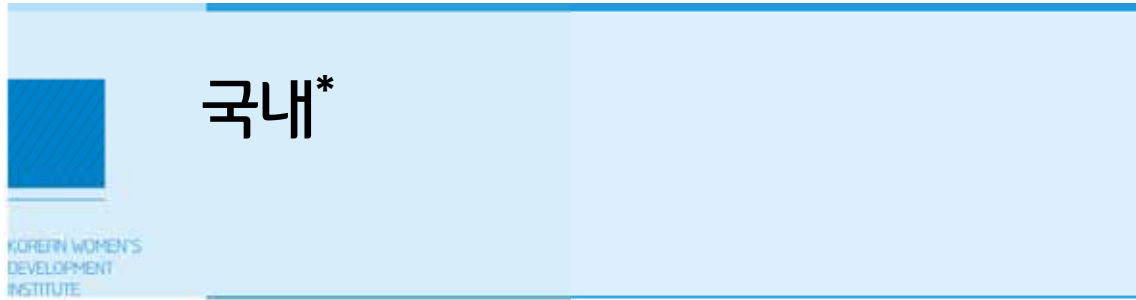
- 스페인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8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17건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살해당한 여성이라고 한다. 즉, 5건 중 1건의 살인사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인 것이다.
- 작년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총 76건 중 14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약 2% 남짓의 낮은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스페인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살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가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은 올해 상반기, 전역에 강력한 이동제한령(lockdown)을 실시해왔다.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이후인 올해 4월의 경우,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고, 5월의 경우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5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바르셀로나에 살던 4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이 지나 경찰은 집 근처 개울가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이어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바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 용의자는 바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미 성추행 및 여성대상 폭력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었다.

6) 작성: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그러나 위와 같은 동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젠더폭력 철폐를 위한 정부 대표(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를 역임한 바 있는 미겔 로렌테(Miguel Lorente)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제한령이 끝나면 심각한 폭행 및 살해 접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성들이 지금은 피해를 입더라도 이동제한령 때문에 그 폭력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여건이 가능해지면 피해 신고 접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제한령 기간에는 가해자 본인이 여성 파트너를 통제(control)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위험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과거 실제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이기도 했고 지금은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Fundación Ana Bella를 운영하는 아나 벨라(Ana Bella)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령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대면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4월에는 통계상 접수된 여성 살해 사건이 0건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핫라인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작년 대비 4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한 여성은 무려 7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폭력 및 살해 위협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상당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스페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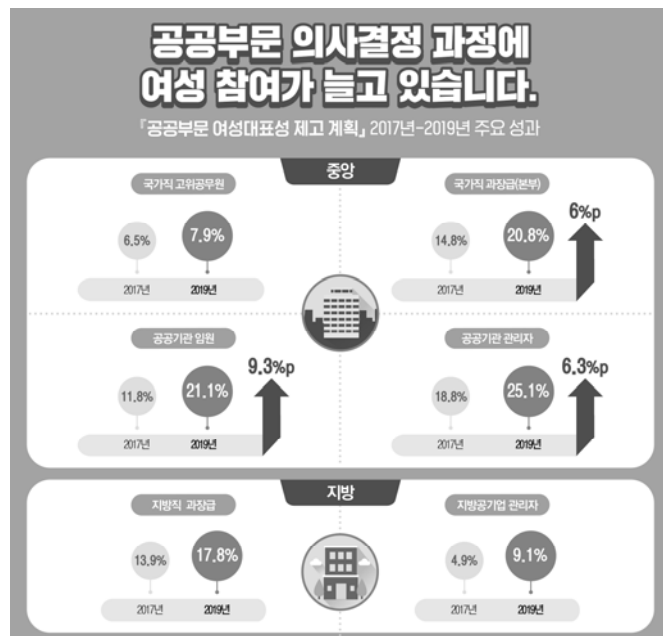
- Euro Weekly(2020.05.17.), “One in every five murders in Spain this year were women killed by their partner or ex”, <https://www.euroweeklynews.com/2020/05/17/one-in-five-murders-in-spain-this-year-were-women-killed-by-partner-or-ex/> (접속일: 2020.05.22.)
- Olive Press(2020.05.01.), “Man arrested in Spain’s Catalunya on suspicion of murdering his girlfriend and dumping her body in a stream”, <https://www.theolivepress.es/spain-news/2020/05/01/man-arrested-in-spains-catalunya-on-suspicion-of-murdering-his-girlfriend-and-dumping-her-body-in-a-stream/> (접속일: 2020.05.22.)
- The Guardian(2020.04.28.), “Women killed in Spain as coronavirus lockdown sees rise in domestic violenc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28/three-women-kill-ed-in-spain-as-coronavirus-lockdown-sees-rise-in-domestic-violence> (접속일: 2020.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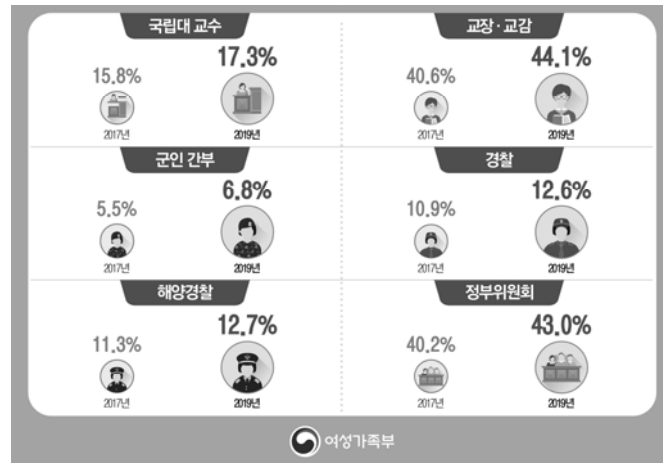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1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발생

- 여성가족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함
  -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18]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5)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증가

-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개최해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논의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는 4배, 이행금액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행건수 : ('15) 514건 → ('17) 1,018건 → ('19) 1,993건
      - 이행금액 : ('15) 25억 원 → ('17) 142억 원 → ('19) 262억 원
      -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0)

**‘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 강화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4)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설명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5)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폭력 피해)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10.3%(2016년 12.1%), 남성은 6.2%(2016년 8.6%)로 나타남
  - (신고 인식)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88.3%로 가정폭력 신고 인식이 높게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6)

### 의료기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류 간소화

-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5)

###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신속 삭제 및 심리·수사·법률 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밝힘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7)

### 여성가족부, 주민 돌봄 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 여성가족부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2020년 4월부터 본격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2]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49)

### 여성가족부, 개학·개원 연기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과 개원의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3.]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5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53)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련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안)’(이하 안전수칙) 제안

- 아동·청소년: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등[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95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955)

###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에 추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95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957)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가 마련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3.]

〈개선 사항〉

구분	기 준	개 선
대책의 범위	▶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처벌기준 (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美 10년이하 vs 韓 1년이하 징역)	▶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선고 ▶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구분	기 존	개 선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처벌 사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 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 환수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 시 수익환수 곤란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 차단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 → 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4)

### 아동정책 수립, 관광사업 개발에도 양성평등한 관점 필요

- 여성가족부는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 및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심의
  -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 신설 제안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3.]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3)

### 2020 청소년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청소년 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의식 등을 담은 2020 청소년통계를 발표
  -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96.4%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성평등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 강도\*도 세짐
  - \* 양성평등에 관한 강한 긍정: ('13) 56.3% → ('16) 61.6% → ('19) 73.5%

-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97.3%가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94.6%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85)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9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98)

###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및 취소 사유 추가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 → 3년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9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99)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30.]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0)

## 각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지난 1년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을 맞아 부처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 현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설치·운영됨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법령, 시설, 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여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성주류화제도가 정책실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0)

### 랜덤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 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 이번 고시(안)은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1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1)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

- 여성가족부는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2)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4월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을 점검함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3)

###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음
  - 평생 한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34)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특별 실시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6.]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4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40)

###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및 '성주류화 강화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9년 5월 신설된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을 맞이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전담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6.]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4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41)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875백만 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218백만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체계 구축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 아웃리치) 강화[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3.]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5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59)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및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 가능
  -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9.]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3)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적인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험’을 주제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한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성인지적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09.]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8)

## 코로나-19로 인한 여성과 가족 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분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10.]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69)

## [법무부]

##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을 대검에 지시하고,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 예정

-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②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 ③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④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법무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 법무부가 2019년 4월 발족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국내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② 「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 개선, ③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개선 등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함. [법무부 보도자료, 2020.05.08.]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

[고용노동부]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3.24.]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7](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7)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기간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조부모나 친척이'(42.6%), '부모가 직접'(36.4%),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긴급돌봄'(14.6%) 순으로 조사
  - 맞벌이 근로자는 외벌이에 비해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도 높고(맞벌이 64.9%,

외별이 49.3%), 평균 사용일수도 더 길게 나타남(맛별이 4.5일, 외별이 3.3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4.0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3](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43)

## [보건복지부]

###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며(1조 539억 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3.2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

###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 발표
  - 장기요양 수급자는 여성 72.8%, 남성 27.2%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자녀 68.8%, 배우자 11.7%, 본인 8.6%로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큰 영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3.3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5380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53801)

### “감염병 위기와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과 성인지적 영향에 주목하여, 젠 더폭력, 생식/성 건강, 만성질환, 정신건강, 빈곤/실직, 돌봄부담 등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포럼을 개최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5.28.]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753](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753)